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지방자치단체] -

2026. 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2026년 시행계획 개요	1
II. 2026년 시행계획	6
1. 정책 여건	7
2. 추진방향	11
3. 과제 및 예산 규모 현황	13
4. 정책목표별 주요과제	16
5. 체류주기/체류자격별 사업현황	27
6. 주요과제 추진일정	28
III. 지방자치단체별 2026년 시행계획(요약)	30
IV. 지방자치단체별 2026년 시행계획	별도 첨부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특별자치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북특별자치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I . 2026년 시행계획 개요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수립 대상기관 및 정책

4. 2025년 외국인정책 관련 주요 통계

[참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 비전 및 정책목표

1

추진 배경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수립

- '23.12.27.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확정

☑ **비전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 **5대 정책목표**

- ① **【경 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② **【안 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 ③ **【통 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④ **【인 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⑤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정책목표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 경과

- '23. 12. 27.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확정
- '25. 7. 17.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 '25. 9. ~ 10.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시행계획 제출
- '25. 11. ~ 12.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종합
- '25. 12. 10. 제37차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개최(대면)
- '26. 2. 2 ~ 2. 6. 제3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3

시행계획 수립 대상기관 및 정책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 위원부처 등 21개 기관(14부·1위원회·1처·5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경찰청, 국세청, 해양경찰청,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 20개 위원부처 중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가 없는 재경부, 기획처, 국조실은 제외하고, 추진과제가 있는 국세청, 해경청, 질병청, 재외동포청은 대상기관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 : 서울 등 17개 광역지자체

※ 1 특별시, 1 특별자치시, 6 광역시, 3 특별자치도, 6 도

대상 정책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에 따른 외국인정책*

* 국경·출입국 및 체류관리, 사회통합과 국적 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 국민의 해외 이주 제외)과 동일한 의미

□ 주요 정책 대상 ('25년 12월 말 기준)

○ 체류외국인 약 278만 명

- (단기체류 약 62만 명) 친지방문, 관광, 사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 (장기체류 약 216만 명) 취업, 유학 등 91일 이상 장기 거주 및 결혼이민, 영주 등 국내에 영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장기체류외국인은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적취득자 약 34만 명

- 외국인 중 귀화, 국적회복 등의 절차에 의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국민

4 | 2025년 외국인정책 관련 주요 통계

❖ (체류외국인) '2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5,112만 명) 대비 약 5.4%에 해당 (출처: 법무부·행안부)

※ ('21년) 196만 명(3.8%) → ('22년) 225만 명(4.4%) → ('23년) 251만 명(4.9%) → ('24년) 265만 명(5.2%) → ('25년) 278만 명(5.4%)

- (불법체류자) '25년 12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57,598명, 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율 12.8% (출처: 법무부)

※ ('23년) 42만 명(16.9%) → ('24년) 39만 명(15%) → ('25년) 35만 명(12.8%)

- (난민) '94년~'25년 12월 말까지 난민신청 136,720건 중 107,642건 심사 종결

※ 난민인정 1,679명, 인도적 체류 2,727명 (출처: 법무부)

❖ (국적취득자) '25년 1월~12월까지 귀화자(11,344명), 국적회복자(4,037명) 등 총 15,381명 (출처: 법무부)

※ '91년~'25년 12월까지 총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는 약 34만 명

❖ (외래관광객) '25년 1월~11월까지 외래관광객*은 1,446만 명이며, 전년 동월 1,242만 명 대비 약 16.5% 증가 (출처: 한국관광공사)

* 외래관광객 = 총 외국인 입국 - (외교+동거+거주+군인+영주) + 재외국민 입국자 수 + 승무원

❖ (외국인투자액) '25년 기준 외국인투자액은 360.5억 달러, 전년 대비 4.3% 증가 (출처: 산업부)

참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정 책 목 표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중 점 과 제	①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②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③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④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①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②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③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①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②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③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④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①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②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③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①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②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 기반 확충 ③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④ 국제사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Ⅱ . 2026년 시행계획

- 1. 정책 여건**
- 2. 추진 방향**
- 3.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 4. 정책목표별 주요과제**
- 5. 체류주기/체류자격별 사업 현황**
- 6. 주요과제 추진일정**

1 정책 여건

□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 유지

주요 언론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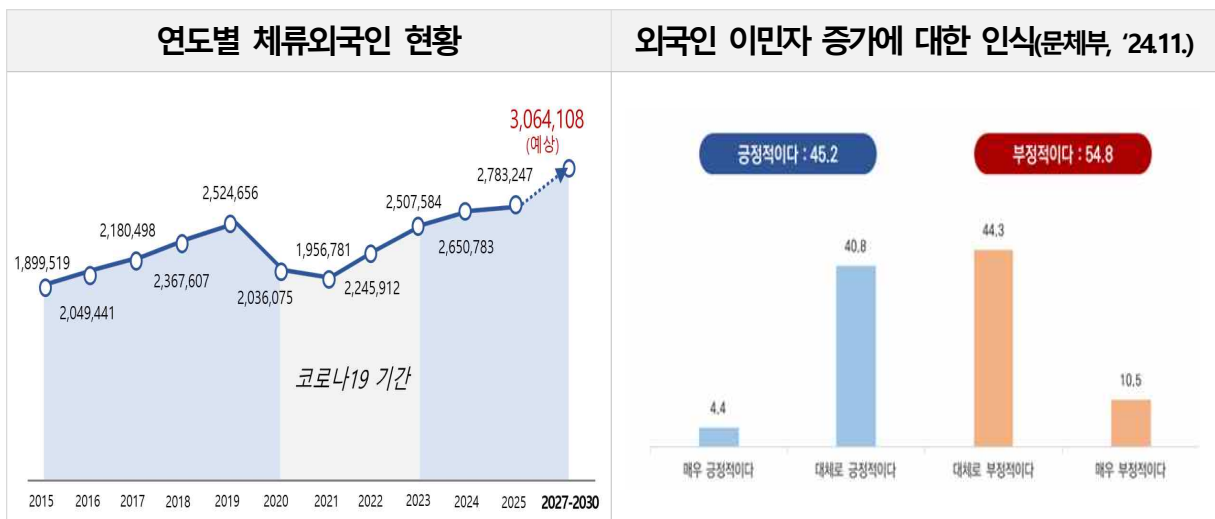
- ❖ 인구소멸 위험 부산, 인구수는 줄어드는 반면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증가 (MBC, '25.9.)
- ❖ 외국인 늘면서 범죄도 증가... "수사 등 대응 한계" (KBS, '25.4.)

○ 체류외국인은 전체 인구(25년 기준 5,112만 명) 대비 5.4%로 '26년 3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며, 이민자 증가는 인구감소, 노동력부족 해결 기대와 함께 사회적 비용 증가, 치안 상황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

- (현 상황) 新출입국·이민정책 발표 시점('24.9.)의 향후 5년 내 300만 돌파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며, 국민인식 조사 결과 외국인 이민자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고 안전·사회문제 해결이 중요

※ 가장 시급한 이민정책으로 "안전·사회문제 해결"이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문체부, '24.11.)

- (시사점) 인구감소 대응과 단순 인력공급 차원의 외국인 유입 관점에서 벗어나, 인구·노동력·지역·안전·인권·사회통합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이민행정 필요



□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심화

주요 언론동향

- ❖ 유럽·日·영국 'AI 두뇌' 유치 총력... 韓도 인재 붙잡을 대책 시급 (조선비즈, '25.8.)
- ❖ "100년에 한번 기회" 美 떠나는 인재들 잡으려 세계 각국 경쟁 (연합뉴스, '25.5.)
- ❑ (대통령실 수보회의, '25.9.)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글로벌 이공계 인력 유치 기회로 활용 필요

○ 고령화로 인한 인력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 경쟁 치열

※ '23년 기준 한국의 세계 숙련노동자 유치 경쟁력은 회원국 38개국 중 25위(OECD, 인재유치지표)

- (현 상황) 조선업 등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을 확대 유치하였으나, 최고급 우수 인재 등 주요 전문인력은 정체* 상태

* 전문인력(교수회화연구기술지도.점수제 우수인재 등) 42,159명('20년) → 56,313명('25년)

- (시사점)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주거·교육·세제 등 생활 여건 유인책 제공 필요

□ 지방소멸 가속화

주요 언론동향

- ❖ 지방인구소멸 가속화... 기초지자체 5곳 중 1곳, 출생아 100명 이하 (조선비즈, '25.3.)
- ❖ "지역소멸 마지노선 2만 명... "50년 안에 78곳 붕괴 (KBS뉴스, '24.8.)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사회 인력 부족이 지속되어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

※ 경제활동인구 1만 명 미만 사군구가 현재 0곳에서 '42년 15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 '25.9.)

- (현 상황)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으나, 지역 이민정책은 지자체마다 관심 사안*이 다르고, 중앙 주도 정책에 지자체가 따라가는 단계

* 수도권 지역은 우수 인재, 유학생 유치 중심, 지방은 계절근로, 단순노무인력 유치 중심

- (시사점) 외국인 유치가 지역소멸 위기의 실질적 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지역 주도로 지역 실정과 수요에 맞는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필요

□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미흡

주요 언론동향

- ❖ 한국인 자리 메우는 유학생 알바생... 차별적 시선은 여전(국민일보, '25.11.)
- ❖ "지게차에 묶어 공중에 들어올려 조롱"... 나주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논란(뉴스1, '25.7.)
- ❑ 대통령 말씀(국무회의 '25.8.12.) "이주노동자,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주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 당부"

- 이민자 차별과 외국인 노동자·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나, 이민자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

※ 한국 생활에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17.4%로 유학생(27.7%)이 가장 높고, 차별의 주된 이유로 '출신 국가(54.5%)'가 가장 높게 나타남(이민자 체류실태 조사, '25.3.)

- (현 상황)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은 피해 구제가 어렵고, 미등록 아동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사각지대 발생
- (시사점) 침해 외국인의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신분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사회통합 수요 증대

주요 언론동향

- ❖ 장기 거주 외국인 258만 명 '사상 최대'... 사회통합은 새 과제(디지털타임스, '25.10.)
- ❖ 일하는 평일에 몰린 한국어 수업... 이주노동자 발 동동(MBC강원, '25.3)

- 정주형 외국인 증가와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내국인과의 갈등, 언어·사회부적응 문제 등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 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국민과 이민자 간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 (현 상황) 이민자의 한국사회 이해·적응을 돕는 사회통합 정책의 외형적 확대에 비해 교육 접근성이 낮고, 이민 2세대·계절근로자·비전문인력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의 공급 부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15년) 25,795명 → ('25년) 90,180명 (3.5배 증가)

※ 계절근로자('23년), 외국인근로자와 재정착난민('24년)을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대상에 포함

- (시사점) 일방향적 정책에서 탈피 국민과 이민자가 상호 교류하는 양방향적 사회통합, 정책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 추진 필요

□ 반(反)이민정서 확산

주요 언론동향

- ❖ “캄보디아인 버스서 내려라” 까지... 납치 사건 이후 번진 ‘혐오’(동아일보, '25.10.)
- ❖ ‘차이나 아웃’... 혐오정서 키우는 반중 집회 1년간 110건 열려(서울신문, '25.9.)
- ▶ 대통령 말씀(국무회의 '25.11.11.)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 장치 마련 필요

- 국민 일자리 침해, 외국인 범죄 증가 우려 등 이민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과 특정 사건이나 가짜 뉴스 등을 통해 나타나는 이민자에 대한 오해, 외국인 혐오 등으로 반(反)이민정서* 확산

- * 최근 중국 관광객 무사증 입국에 따른 반중 시위, 캄보디아 사태로 인한 외국인 혐오 등
- (현 상황) 특정 국가에 대한 반감, 외국인 혐오로 인한 인종차별 등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미흡하고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음

※ '24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성인은 53.38점, 청소년은 69.77점(성평등부, '25.6.)

- (시사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제공과 이민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필요

- 체류외국인 300만 대비 미래지향적·사회통합적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 경제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
- 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 및 국민 인식 개선 강화

□ 통합적·체계적 외국인 관리 및 체류질서 확립

- 단기 수요에 초점을 맞춘 인력정책에서 탈피, 과학적 기반을 둔 인력 유입과 정주·통합을 고려한 이민정책을 위해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
-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27년까지 불법체류자 20만 명 이하로 감축, 다부처 및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질서있는 체류 환경 조성

□ 글로벌 우수인재 적극 유치

- 「Top-Tier 비자」 적용 분야를 AI·미래 모빌리티·로봇·방산 등 신규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교수·연구 인력까지 적용 대상 확대
 - ※ 'K-Tech Pass 정착지원패키지'와 연계 세제·교육·주거 등 혜택 부여
- KAIST 등 現 5개 특성화대학에 우수 일반대학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영주·귀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K-STAR* 트랙 신설

*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 지역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 지역 내 전문대학을 활용,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중간기술 수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 지역특화 비자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규모 확대, 광역비자 시범사업 평가분석을 통한 운영성과 검토 및 정식 제도화 추진

□ 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

- 장기 출국대기자의 인도적 처우 향상 등을 위해 공항 보안구역 밖에 출국대기소를 신설하고 법적 근거 마련
- 인권침해 외국인이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을 법제화하여 운영 활성화

□ 정책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확대

-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인권보호, 산업안전 등에 관한 내용 편성
-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이 한국어·한국문화 등 한국 적응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 前 온라인 사회통합 교육 제공

□ 반(反)이민정서 해소를 위한 국민 인식개선

-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국민 수용성 제고, 이민정책 관련 데이터 연계 확대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호 문화 이해 등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확대

3 과제 및 예산 규모 현황

□ 총괄 현황

- (총괄) 전체 추진과제 1,636개, 총 예산 **약 7,902억 원**
 - 전년도 예산(7,307억 원) 대비 약 595억 원 증가(8.1% ↑)
 - 전년도 추진과제(1,504개) 대비 과제 수 132개 증가(8.8% ↑)
- (중앙행정기관) 전체 추진과제 162개, 총 예산 **약 4,027억 원**
 - 전년도 예산(3,747억 원) 대비 약 280억 원 증가(7.5% ↑)
- (지방자치단체) 전체 추진과제 1,474개, 총 예산 **약 3,875억 원**
 - 전년도 예산(3,560억 원) 대비 약 315억 원 증가(8.8%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목표	'26년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합 계	1,636	790,257	162	402,741	1,474	387,51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경제】	278	334,249	57	252,360	221	81,889	(17.0%)	(21.1%)
	(17.0%)	(42.3%)	(35.2%)	(62.7%)	(15.0%)	(21.1%)		
2. 【안전】	48	14,845	26	13,521	22	1,324	(2.9%)	(1.9%)
	(2.9%)	(1.9%)	(16.0%)	(3.4%)	(1.5%)	(0.3%)		
3. 【통합】	1,084	354,812	36	109,611	1,048	245,201	(66.3%)	(44.9%)
	(66.3%)	(44.9%)	(22.2%)	(27.2%)	(71.1%)	(63.3%)		
4. 【인권】	158	76,154	21	20,090	137	56,064	(9.7%)	(9.6%)
	(9.7%)	(9.6%)	(13.0%)	(5.0%)	(9.3%)	(14.5%)		
5. 【협력/인프라】	68	10,197	22	7,159	46	3,038	(4.2%)	(1.3%)
	(4.2%)	(1.3%)	(13.6%)	(1.8%)	(3.1%)	(0.8%)		

□ 중앙행정기관 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 관	연 도	2026년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62	402,741
교 육 부		9	152,158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1	53,734
외 교 부		1	0
법 무 부		94	34,791
행 정 안 전 부		3	34
문 화 체 육 관 광 부		8	33,842
농 립 축 산 식 품 부		5	6,217
산 업 통 상 부		3	977
보 건 복 지 부		1	5,911
고 용 노 동 부		9	2,030*
성 평 등 가 족 부		4	80,441
국 토 교 통 부		2	0
해 양 수 산 부		3	10,812
중 소 벤 처 기 업 부		3	13,278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		2	0
국 가 데 이 터 처		1	2,630
경 찰 청		4	1,700
해 양 경 찰 청		1	0
국 세 청		1	0
질 병 관 리 청		1	0
재 외 동 포 청		6	4,186

*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과제 사업(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결혼이민자 등 대상자별 추출 불가로 관련 예산 제외

□ 지방자치단체 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 관	연 도	2026년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474	387,516
서울 특별시		106	52,209
부산 광역시		50	11,922
대구 광역시		79	10,623
인천 광역시		34	21,951
광주 광역시		67	14,299
대전 광역시		57	12,039
울산 광역시		59	8,191
세종 특별자치시		20	739
경기도		241	93,853
강원 특별자치도		72	16,836
충청북도		99	12,288
충청남도		144	16,948
전북 특별자치도		88	26,019
전라남도		147	24,987
경상북도		113	25,858
경상남도		69	32,789
제주 특별자치도		29	5,965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가.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 노동시장 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유입 영향 등을 고려하여 취업비자 발급규모 발표 (법무부)
 - ※ '25년 : 숙련기능인력(E-7-4) 35,000명, 계절근로(E-8) 95,700, 선원(E-10) 23,300명
-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활성화) 산업계·지자체 등의 비자 개선 수요를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 후 정책에 반영 (법무부)
- (이민행정 데이터 분석 등 지원)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외국인 관련 데이터 분석·활용하도록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개방 확대 (법무부)

나.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 우수·전문인력 유치 확대 및 육성

- (K-STAR* 트랙 신설)^{신규} 現 5개 특성화대학(KAIST, DGIST, UNIST, GIST, UST) 외에 지방거점 국립대 등 우수 일반대학 석·박사에게 영주·귀화 절차 단축(석·박사 → (학위취득) 거주 → 국적(3년)) (법무부)
 - * Korea - 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 (툽티어 비자 및 우수연구자 지원 확대) 비자 적용 대상을 AI·첨단 모빌리티·로봇·방산 분야와 교수·연구 인력까지 확대하고, 우수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법무부, 산업부, 과기부)
 - ※ 'K-Tech Pass 정착지원패키지와 연계하여 세제교육주거 등 종합 이민정책 혜택 부여
-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신규} 지역 내 전문대학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중간 수준의 기술인력 양성 (법무부)

□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로 산업계 구인난 해소

- (숙련기능인력(E-7-4) 공급 확대)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 인력공급 지원을 위해 산업별 별도 쿼터 신설 및 점진적 확대 (법무부, 노동부, 국토부)
※ (E-7-4 전환) 1,781명('22년) → 12,035명('23년) → 13,392명('24년) → 11,510명('25.12.)
- (유학생 취업 특화비자 신설)^{신규} 사회통합 가능성이 높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외 구인난이 심각한 비전문 산업분야에 취업 허용 (법무부)
- (뿌리산업 숙련기술인력 지원) 뿌리산업 양성대학* 추가 선정,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기량 검증을 통해 숙련인력을 선발하여 산업체에 공급 (산업부)
* 외국인 유학생 양성 및 뿌리기업 취업 연계 지원 (現 경기과학기술대 등 12개 운영)

□ 분야별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도입) 젊은 돌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지정·운영 (법무부, 복지부)
※ 13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천한 전국 24개 대학 선정 (2년 시범사업 운영)
- (계절근로 전문기관* 신설)^{신규}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와 민간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성격의 전문기관 지정·운영 (법무부, 농식품부)
* (업무)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계절근로자 선발·입출국·교육·통역·체류 지원 등
-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관계부처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노동시장 영향 등을 분석하여 신규 허용 업종 확대 추진 (노동부, 농식품부, 법무부)

□ 유학생 유치 다변화 및 성장 지원

-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 국제화 역량 제고 (교육부)
- (우수 유학생 취업 연계) 유학생과 지역 소재 국내기업 간 채용 연계를 위한 박람회 및 권역별 상담회 개최 (교육부, 산업부)

- (ODA 활용 국제장학프로그램 확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지원 및 교환학생을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확대 (교육부)

다.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 (지역특화 비자제도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규모 확대 등 제도 개선 (법무부)
- (초단기 계절근로 수요 지원) 지자체 초청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일괄 고용 후 농가에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농업 법인 등을 통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도입 (농식품부, 법무부)
- (「광역형 비자」 정식제도화 준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평가분석을 통한 운영성과 검토 및 정식제도화 추진 (법무부)
 - ※ (유학 D-2) 10개 지자체 4,420명 배정, (특정활동 E-7) 5개 지자체 2,190명 배정
- (지자체 참여 촉진)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지자체 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민정책 수립·심의 시 의견제시 (법무부)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및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교육)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역 이민정책 현안 파악 및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법무부, 행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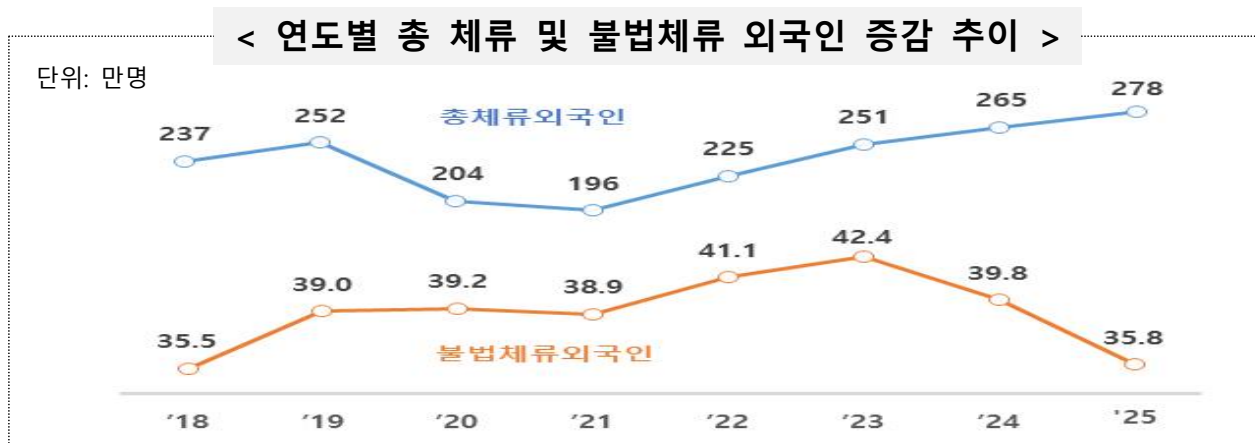
라. 이민정책과 국가 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K-Pop,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신규 콘텐츠 발굴,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한시 시행 (문체부, 법무부)
- (크루즈 관광 활성화) 해외 거점 지사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 크루즈 박람회 개최 및 크루즈 상품 개발 (문체부, 해수부)
-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외국인 환자 유치 채널 확대, 의료관광 유치 기관 평가·인증제 활성화, 의료통역 지원 강화 (복지부, 법무부)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가.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불법체류 감축 지속)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등 상시 단속체계 가동,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법무부)



※ 정부합동단속 2회 실시 등 불법체류 외국인 총 48,458명 적발

- (근로감독 강화)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외국인고용법, 노동관계법, 산업안전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지도·점검 (노동부)
-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대응, 치안 협력 네트워크(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외국인 문제 해결 (경찰청)
-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건설협회 설명회 개최를 통해 건설업체 담당자의 인력정책 이해도 제고, 합법체류자 고용 유도 (국토부)
- (민생침해 및 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배달업 등 서민 일자리 잠식 업종,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협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및 집중단속 실시 (법무부, 경찰청)
- (불법취업 등 정보수집 체계화) SNS 등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업 알선 등 정보 취득을 위해 이민특수조사대(서울청 등) 등 활용 (법무부)

나.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 강화) 국적제도에 대한 지식과 인권감수성 등을 갖추어 국적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법무부)
- (국적 법령 정비 및 홍보 강화)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국적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설명회를 통해 복수국적, 국적이탈 등 관련 제도 안내 (법무부)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 실시 (국토부)
- (치안 활동 전개) 체류외국인에 대해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실질적 참여 증진 (경찰청)

다.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 (AI 기반 출입국 절차 간소화)^{신규} 고위험 외국인 선별을 위한 AI 기반 정보분석 시스템 도입, AI 활용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구축 (법무부)
- (전자여행허가제 시스템 개선) 챗봇 기반 이용자 맞춤 자동응답 서비스 제공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사업 수행 (법무부)
- (공항만 검역 대응·협력 강화) 입국자에 대한 관계부처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세계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 공유·모니터링 및 방역 실시 (질병청)
- (항만 보안 강화) 선박검색과 항만순찰 강화로 밀입국·밀수 등 외국인 범죄 단속, 법무부(인천청) 신규 감시정 건조 (법무부, 해경청)
- (항만 테러 예방)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등 항만 보안시설·장비 개선, 전국 항만 합동 보안 세미나 개최 등 항만 분야 점검 (해수부)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외국인력, 동포,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게 일정 단계 이상 이수 요건 규정 (법무부)
-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농·어촌 계절근로자 이수 의무화, 조선업·건설업 근로자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2시간) 운영 (법무부)
- (입국 前 사회통합 교육 제공) 장기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前에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보 제공 (법무부)

나.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 (공무원 대상 상호문화 이해 교육 확대) 중앙부처·지자체·경찰 공무원 및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이민정책의 이해」 교육과정 확대 운영 (법무부)
- (다문화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제공) 다누리배움터(www.danurischool.kr)를 통한 교육 및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제공, 인식개선 관련 홍보 (성평등부)
-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및 학교 내 다문화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개최 (교육부)
- (국민과 이민자의 어울림 행사)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 등 지역 주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법무부)
- (문화다양성 정책 시행) '문화다양성의 날(매년 5.21.)'과 '문화다양성 주간(매년 5.21.~5.27.)' 기념행사 개최,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조사 실시 (문체부)

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AI 교육 등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교육 제공 (농식품부)

- (외국인근로자용 맞춤형 교재 개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입문·기초·심화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부속자료(교사용 지침서, 수업용 보조자료) 개발 (문체부)
- (외국인력 상담 서비스 제공) 상담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내방·전화상담 및 3자 통역 서비스 제공 (노동부)
- (외국인 대상 라디오 방송 제작) 통신서비스 활용 방법과 피해 예방 교육 제공,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방미통위문체부)
-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지속)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역량 강화, 기초학습 지원, 청소년기 진로 상담 등 사업 시행 (성평등부)
-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외국인·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공교육 진입 지원 강화, 한국어 집중교육 및 학교적응·학업 지원 (교육부법무부)
- (이주배경 학생 관련 용어 정비)^{신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 행정·통계 용어를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의하고, 용어 표준안 마련 (법무부)

라.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 (동포 체류자격 통합과 취업 범위 확대) 한국어 교육 확대 등 동포 사회 통합 교육 강화, 산업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동포(F-4) 취업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법무부)
- (동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동포의 국내 정착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법제화 추진 (법무부)
- (「국내 거주동포 실태조사」 실시) 동포 취업 현황, 생활 실태 및 자녀 교육 등 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동포 지원 정책 수립 (법무부)
- (재외동포 청년 인재 유치)^{신규} 동포 대학(원)생 대상 장학금 지원, 한국어 및 한국이해 교육 제공, 국내 취업 희망 동포 청년 취업 연계 지원 등 국내 유입 → 적응 → 취업 → 정주 선순환 구조 구축 (재외동포청)
- (고려인 동포 사회통합 강화)^{신규} 고려인 동포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개발, 동포 정체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법무부)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가.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

-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도·임금체불 보증보험 등 제도 안내·홍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노동부)
- (재난·재해 정보 제공) 재난안전포털(eng.safekorea.go.kr), 재난·안전 모바일 앱(Emergency Ready App)의 국민행동요령, 재난안전시설 등 자동번역 제공 (행안부)
- (방송사 자체 심의 기능 강화) 외국인·이민자·타 문화 등에 대한 편견, 차별적 방송 사례 소개 및 심의 규정 안내 (방미심위·방미통위)
- (출국대기자 처우 향상) 장기 출국대기자의 인도적 처우 향상 등을 위해 공항 보안구역 밖의 출국대기소 설치와 법적 근거 마련 (법무부)
-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신규} 보호기간 상한, 보호해제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독립적 형태의 보호위원회 운영 (법무부)
- (권리구제 절차 보장)^{신규} 인권침해 피해 외국인의 실질적 권리구제 절차 보장을 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법제화 추진 (법무부)

나.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통과 추진) 미등록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기본권과 법적 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률안* 논의 협조 (법무부)
*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등 3건, 22대 국회 계류 중
- (다문화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다문화 학생·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강화, 학교전담경찰관(SPO) 1:1 면담·멘토링 실시 (경찰청)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 보호) 피해자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33개소)·상담소(9개소) 운영을 통한 상담·의료·법률·숙식,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성평등부)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피해자 발견과 보호조치, 올바른 식별지표 이해와 적용을 위한 직원 교육 및 간담회 실시 (법무부)

다. 국제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심사제도 구축) 난민 전담 공무원 교육, 「난민 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난민전문통역인 통역 능력 평가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한 난민인정 심사 역량 강화 (법무부)
 - (난민 이의신청 절차 공정성 강화) 추가 면접, 서면질의 등 이의신청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법무부)
 -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국가정황정보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차년도), 주요 난민 수용국(EU, 호주 등) 국가정황정보 기관과 교류·협력 (법무부)
- *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COI): 난민신청자 출신국의 인권, 안보, 정치·경제, 사회문화, 법체계, 주요 사건 등을 의미하며 난민심사 시 핵심 판단 자료임
- (난민 처우 개선) 난민인정자의 영주허가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난민인정자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난민법령 개정 추진 (법무부)
 -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국제사회 요구와 우리사회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대상, 규모, 사업국 등 결정 및 국내 정착지원 제공, 난민의 보충적 유입경로인 학생난민 수용 추진 (법무부)
 - (난민 관련 국제기구 교류) UNHCR, 재정착난민에 관한 실무회의 등 국제협의·회의 참여, IOM 등 난민 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 교류 지속 (법무부, 외교부)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가.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강화

- (전담조직 신설 검토) 공론화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출입국·이민 정책 전담조직 신설 방안 지속 검토 (법무부)
- (외국인정책실무분과위원회 정례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이민 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위 개최 (법무부)
 - ※ 5개 실무분과위원회: 전문인력 유치지원, 동포·난민·통합·국적, 국경·체류·안전, 중앙·지방협력,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

나.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 (이민정책 연구기반 마련) 법무부·이민정책연구원·지역연구원 등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연계 강화 지속 (법무부)
-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이민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중점·기본 연구과제 확대 수행 (법무부)
-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출입국·이민정책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 완성도 제고 (법무부)

다.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 (이민행정 대민포털 개편 ISMP 추진) 대민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자민원 처리 체제로 전면 전환 및 AI 활용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법무부)
 - * Hi-Korea, 비자포털, 사회통합정보망, 유학생정보시스템 등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국내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모바일 등록증 발급(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법무부)
 -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36,383건 발급 ('25.1.10 ~ '25.12.31. 기준)

- (외국인 관련 통계 공표) 「인구총조사」,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국제인구이동통계」, 「이주배경인구통계」 등 생산·제공 (국가데이터처)
- (AI 활용 체류 심사 체계 구축)^{신규} 전자적 방식의 외국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AI 분석 기반 확립으로 신속·정확한 체류 심사 지원 (법무부)

라. 국제사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 (GCM* 이행점검 대응) GCM 목표의 자발적 이행력 확보, 주기적 점검을 위한 내부 협의체 운영 및 이행점검 회의 대응 (법무부)
 - *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국제이주의 효과적 관리 및 이주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최초 합의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협력 체계
- (국제이주 관련 협력) OECD 이주작업반(Working Party on Migration) 참여, 이주 전문가그룹(SOPEMI) 연례회의 참석 (법무부)
- (KOICA 협력 ODA 사업 추진) ODA 사업 분야 및 대상 국가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후 활용 방안 추진, 개발도상국 이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출입국분야 강의 등 KOICA 협력 연수 제공 추진 (법무부, 외교부)
 - ※ 인도네시아 이민청 대상 국익 위해자 관리 역량 교육, ANDEX 회원국 대상 문서감식 역량 강화 등 추진 예정

5

체류주기/체류자격별 사업 현황

체류주기	사업 현황
단기체류	전자입국신고서 활용 제고,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고도화, K-컬처 융합 관광프로그램 개발,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보완,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입국 전 온라인 사회통합교육, AI 기반 출입국 심사 및 정보분석 시스템 도입 등
장기체류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요자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추진,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 정비, AI 활용 체류심사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이용 확대 등

체류자격	사업 현황	
D계열	유학생 (D-2, D-4)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실태조사 실시,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운영,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졸업 유학생 취업특화 비자 운영 등
	투자자 (D-7~D-9)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등 국내 기술창업 지원 등
E계열	전문인력 (E-1~E-6)	「Top-Tier 비자」 대상 확대, K-STAR 비자트랙 운영, 해외 우수과학자 초빙·유치 사업, K-Tech Pass 정착지원패키지 운용 등
	특정활동 (E-7)	「광역형 비자」 정식제도화,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 및 제도 개선,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운영,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기량 검증,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등
	단순노무인력 (E-8~E-10)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단순노무 신규 허용 업종 확대 검토,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 조기 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추진 등
F계열	결혼이민자 등 (F-2, F-6)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속,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대상 농업교육,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점검·운영, 지역특화비자 제도 개선 등
	다문화 가족 (F-1, F-3)	이주배경 청소년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용어 정비,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논의 협조 등
	외국국적동포 (F-4)	동포 자격 통합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동포 정체성 제고 프로그램 연구 등
G계열	난민 등 (G-1)	출입국향 난민심사 절차 개선, 재정착난민 수용 사업 추진, 난민심사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국가정황보고서 번역·감수 사업 지속, 난민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기구 교류 강화 등
기타 계열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 외국인보호위원회 운영,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운영,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등

6

주요과제 추진일정

중점과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1-1.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	범정부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 연계 확대	뿌리산업 직종 확대 /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연중)
1-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한국유학종합 시스템 운영 / 뿌리산업 양성 대학 협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 지원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 단순노무 신규 허용 업종 검토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성과교류회
1-3. 지역기반의 이민 정책 체계 구축	외국인주민 정책 참여 현황 분석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2~4분기)	외국인 행정데이터 및 제공 (연중)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평가
1-4. 이민정책과 국가 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	코리아그랜드 세일 개최 / 크루즈 마케팅	크루즈 박람회 / 의료·웰니스 관광행사 개최	K-ETA 고도화(3차)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만평가인증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및 기항지 홍보
2.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2-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불체감축계획 수립 / 특별단속지역 지정	정부합동단속 실시(연중)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연중)	정부합동단속 실시(연중)
2-2.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외국인범죄 예방교실(연중)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 교육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연중)
2-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선박검색 및 항만순찰 강화(연중)	AI 기반 과학적 국경관리 방안 검토(연중)	신규 법무부 감시정 건조 추진(연중)	전자여행 허가제(K-ETA) 고도화(3차) 사업 수행
3.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3-1.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온라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요건 완화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연중)	유학생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연중)
3-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연중)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이민정책이해 교육 실시	문화다양성 정책 홍보	현장기반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운영

중점과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계획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대학생 멘토링 주관 대학 간담회	결혼이민자 농업교육 워크숍 및 결과보고
3-4.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민간단체 보조 사업 지원	동포 사회통합 강화 방안 마련	동포 맞춤형 교육과정 고도화 및 과목 개발	동포 취업범위 확대 / 고려인 동포 사회통합 교재 개발

4.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4-1.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 등 지속 실시 및 홍보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외국인 보호위원회 개최(연중)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지원(연중)	인신매매 방지 등 직원교육 및 소속기관 간담회(분기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상담소 현장점검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실태 점검
4-3.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난민위원회 개최(연중)	유엔난민기구 교류	난민처우협의회 개최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난민인정자 국내 정착 실태 파악

5.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5-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 체계 구축	실무분과 위원회 개최(분기별)	외국인정책 위원회 개최	실무분과 위원회 개최(분기별)	외국인정책 위원회 개최
5-2.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난민전문 통역인 인증제 (연중)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연중)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사업 보고
5-3.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출입국·이민 행정 대민 포털 ISP 추진	「'26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25년 인구총조사 전수조사 결과 공표	전국 장래인구추계 등 공표
5-4. 국제 사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국제이주점검 포럼(IMRF) 대응	OECD 국제이주작업반 회의 참석	개도국 이민업무 담당 공무원 연수 제공	유엔난민기구 등 교류 협력(연중)

Ⅲ.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요약)

서울특별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9,335,444 명 / 이민자 450,888 명 / 비율 4.8 %

구분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50,888	367,291	37,734	34,368	72,261	104,134	118,794	47,124	36,473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106	100%	50,232	52,209	3.9%
1. 경제	9	8.5%	5,440	4,992	△8.2%
2. 안전	3	2.8%	799	1,040	30.2%
3. 통합	87	82.1%	35,912	36,700	2.2%
4. 인권	6	5.7%	8,079	9,473	17.3%
5. 협력 / 인프라	1	0.9%	2	4	100.0%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서울 유학 박람회 개최,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 개최, 30일간의 서울 일주 프로그램, 서울 테크 스칼라십 운영, 강남 메디컬 투어 센터 운영,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이민사회 구현
 -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 운영,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 글로벌 빌리지 센터 운영, 중도입국자녀 종합지원, 非 OECD 외국인 학교 지원, 다문화자녀 통합보육시설 운영,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가족캠프) 등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외국인노동자 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건설안전 교육, 외국인주민 안심귀가 지원(안심이 앱), 외국인 감염성 질환 진료비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부 산 광 역 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3,257,256 명 / 이민자 88,542 명 / 비율 2.7 %

구분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88,542	67,762	16,445	7,518	17,778	4,432	21,589	7,589	13,191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50	100%	10,474	11,922	13.8%
1. 경제	5	10.0%	537	620	15.5%
2. 안전					
3. 통합	40	80.0%	6,714	6,927	3.2%
4. 인권	5	10.0%	3,223	4,375	35.7%
5. 협력 / 인프라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부품소재기업 전용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및 기업 유치, 지역 장기근무 외국인의 숙련기능 비자 전환,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부산글로벌도시재단)을 통한 유학생 유치,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추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글로벌 문화 in 남산 페스티벌, 신규입국자 정보연계 확대,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레인보우 다문화 도서관 운영, 부모교육 및 돌봄친화적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 글로벌 환경조성 및 세계시민교육,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축제 개최, 다문화 이음사업, 글로벌 문화 알리던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주민 종합상담, 외국인주민 통합플랫폼(Life in Busan) 운영 등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전문상담소·보호시설을 통한 지원 강화, 다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긴급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등

대구광역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2,369,335 명 / 이민자 61,554 명 / 비율 2.6 %

거주 유형별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61,554	45,295	9,897	5,838	8,709	3,869	16,982	5,798	10,461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79	100%	10,465	10,623	1.5%
1. 경제	3	3.8%	66	66	0.0%
2. 안전		0.0%			
3. 통합	65	82.3%	9,475	9,589	1.2%
4. 인권	7	8.9%	913	957	4.8%
5. 협력 / 인프라	4	5.1%	11	11	0.0%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추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다문화형) 운영,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달성 글로벌 소녀 합창단 운영,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다문화 알쓸잡(JOB) 대학 운영 등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다문화가족 치료비 지원, 다문화 이주여성 암 검진 지원, 외국인주민 상담 및 캠프지원, 긴급구호비 지원 등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 외국인 유학생 지원협의체 운영 등

인 천 광 역 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3,058,033 명 / 이민자 169,219 명 / 비율 5.5 %

구 계	거주 유형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169,219		127,960	23,039	14,483	7,397	33,694	49,347	22,065	19,194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제 수	비 율	소 요 예 산		
			2025년	2026년	증 감 륜
계	34	100%	20,053	21,951	9.5%
1. 경 제	4	11.8%	4,881	5,746	17.7%
2. 안 전	-	0.0%	-	-	
3. 통 합	22	64.7%	9,992	10,595	6.0%
4. 인 권	7	20.6%	5,174	5,604	8.3%
5. 협 력 / 인프라	1	2.9%	6	6	0.0%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INK 콘서트 개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크루즈 관광 활성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 지원, 결혼이민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지원, 다문화가족 소통·교류 공간 운영, 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재외동포웰컴센터 운영 등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쉼터·자립홈 운영,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등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광주광역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1,444,171 명 / 이민자 47,728 명 / 비율 3.3 %

구분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7,728	35,882	6,400	3,760	7,430	5,021	13,271	4,229	7,617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67	100%	13,349	14,299	7.1%
1. 경제	7	10.4%	827	849	2.7%
2. 안전	1	1.5%	4	0	△100%
3. 통합	45	67.2%	12,001	12,898	7.5%
4. 인권	8	11.9%	504	539	6.9%
5. 협력 / 인프라	6	9.0%	13	13	0.0%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광역형 비자 사업, 자동차부품 제조원 비자(E-7-3) 시범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 외국인 유학생 기술창업 지원,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판매시장 맞춤형 마케팅 등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고려인 아동 전용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외국인아동 필요경비 지원, 광주 세계시민문화 한마당 개최, 고려인주민 지역 정착지원, 글로벌 광주방송(GGN) 운영,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이주여성 쉼터 운영, 외국인주민 친화병원 운영 등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 및 차별 실태조사, 외국인주민 정책협의회,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운영 등

대전광역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1,467,093 명 / 이민자 42,043 명 / 비율 2.9 %

거주 유형별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2,043	31,322	2,895	3,593	12,605	2,098	10,131	3,911	6,810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57	100.1%	12,687	12,039	△5.1%
1. 경제	15	26.3%	9,138	9,217	0.9%
2. 안전	1	1.8%			
3. 통합	31	54.4%	2,967	2,200	△25.9%
4. 인권	3	5.3%	418	459	9.8%
5. 협력 / 인프라	7	12.3%	164	163	△0.6%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유학생 및 연구인력 특화 정책(인턴십 운영, 잡페어 등) 추진, 대전 대덕 연구개발 특구 인프라 활용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외국인 우수인재 관리 플랫폼 개발(지역 내 외국인 우수인재 DB 구축)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 다문화가정 활동 지원, 외국인근로자 취업컨설팅, 무료 운전면허 교육, 법률상담,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외국인주민 무료진료소 운영 등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자매우호도시 및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GINI) 도시 교류 지속, 민간단체, 청소년 및 학교 간 교류 지원 등

울산광역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1,106,895 명 / 이민자 45,392 명 / 비율 4.1 %

계	거주 유형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5,392		35,193	13,100	3,503	1,553	5,239	11,798	3,992	6,207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59	100%	7,909	8,191	3.6%
1. 경제	9	15.3%	1,557	1,577	1.3%
2. 안전	2	3.4%	2	2	0.0%
3. 통합	38	64.4%	3,154	4,310	36.7%
4. 인권	4	6.8%	321	347	8.1%
5. 협력 / 인프라	6	10.2%	2,875	1,955	△32.0%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글로벌세일즈 마케팅을 통한 외자유치 활성화, 외래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외국인을 위한 관광해설사 운영,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활동 강화, 외국인 순찰대 편성 운영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 다시 채움 빈집 리모델링,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 등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결혼이민자 및 자녀 건강증진 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AI 기반 온라인 플랫폼, 외국어 동시통역기 대여 서비스, 외국어 소식지 발행 등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390,156 명 / 이민자 10,739 명 / 비율 2.8 %

구분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10,739	7,992	2,294	956	1,310	984	2,448	983	1,764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20	100%	761	740	△2.8%
1. 경제	4	20.0%	108	110	1.9%
2. 안전					
3. 통합	11	55.0%	355	332	△6.5%
4. 인권	5	25.0%	298	298	0.0%
5. 협력 / 인프라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외국인 유학생 학습·적응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세종 글로벌 리더 육성 등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가정의 달·부부의 날 기념, 다문화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다문화이해 프로그램, 글로벌 요리교실 운영, 부부교육&가족소통 프로그램, 다재다능 프로젝트,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라디오 제작 등
-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지표 교육, 외국인 시민안심보험 지원,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교육 등

경기도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13,914,479 명 / 이민자 845,074 명 / 비율 6.1 %

구 계	거주 유형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845,074		681,201	177,122	62,496	38,501	184,365	218,717	83,971	79,902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241	100%	81,039	93,853	15.8%
1. 경제	12	5.0%	188	124	△34.0%
2. 안전	2	0.8%	20.0	20	0.0%
3. 통합	196	81.3%	71,570	85,270	19.1%
4. 인권	29	12.0%	9,172	8,432	△8.1%
5. 협력 / 인프라	2	0.8%	89	7.0	△92.1%

주요 내용

- 온·오프라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장기 정주 기반 마련
 -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경기도 이주민 포털 구축,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 외국인 주민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통한 정착지원 및 안전망 강화
 - 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지원,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 등
-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력 제고
 -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추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등
-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및 가족공동체 지원으로 사회통합 실현
 -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다문화가족 캠프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 지원 등
- 외국인 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외국인주민협의회 및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운영, 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 운영 등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1,522,881 명 / 이민자 50,652 명 / 비율 3.3 %

구분 유형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계	50,652	36,580	7,989	4,118	6,786	2,519	15,168	5,253	8,819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72	100%	13,279	16,836	26.8%
1. 경제	14	19.4%	129	274	112.4%
2. 안전	1	1.4%	43	89	107.0%
3. 통합	51	70.8%	5,747	6,087	5.9%
4. 인권	4	5.6%	7,360	10,386	41.1%
5. 협력 / 인프라	2	2.8%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광역형 비자사업 추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유학생 동아리활동 지원,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인턴십 운영,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 문화 교류 등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다문화 특성화 사업 추진, 속초 해양산업단지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매,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외국인 우수인재 공모외국인 친화 우수 인증 사업, 무인 민원 발급기 외국인 UI 지원 서비스 지원 등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외국인정책 협력 강화 추진 등

충청북도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1,646,328 명 / 이민자 97,341 명 / 비율 5.9 %

구분 계	거주 유형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97,341		78,349	24432	6065	7705	13240	26907	7530	11462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99	100%	12,150	12,289	1.1%
1. 경제	11	11.1%	1,670	1,725	3.3%
2. 안전	1	1.0%			
3. 통합	76	76.8%	10,081	10,131	0.5%
4. 인권	6	6.1%	397	432	8.8%
5. 협력 / 인프라	5	5.1%	2	1	△50.0%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외국인 창업 및 취창업 생태계 구축,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투자유치, 충청북도 K-유학생 해외 유학 박람회,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추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외국인주민 출입국업무 지원사업, 함께하는 온(溫)가족 축제, K-가디언 멘토·멘티 그룹 운영, 초등 원어민 영어 교실, 꿈꾸는 글로벌 리더스쿨, 고려인 동포 이주 정착 지원사업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외국인 행려자 구호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권익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운영, 외국인주민 지원 위원회 운영, 외국인주민 시책위원회 운영 등

충 청 남 도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2,238,243 명 / 이민자 169,245 명 / 비율 7.6 %

구분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169,245	139,111	40,237	10,169	12,407	28,102	48,196	12,411	17,723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144	100%	18,389	16,948	△7.8%
1. 경제	27	18.8%	2,611	3,467	32.8%
2. 안전	3	2.1%	7	27	285.7%
3. 통합	101	70.1%	13,605	11,125	△18.2%
4. 인권	11	7.6%	2,166	2,328	7.5%
5. 협력 / 인프라	2	1.4%	0	1	100%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글로벌 외국인 유학생 인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당진 교육국제화특구 외국어 교육,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발굴(전국 외국인 K-트롯가요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추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 외국인 대상 법질서 교육 강화, 외국인 방법봉사단 운영, 외국인정책 제도 홍보 강화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고국방문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고려인 축제 등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외국인노동자 상담활동 지원 등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확립, 외국인정책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1,758,836 명 / 이민자 79,224 명 / 비율 4.5 %

거주 유형별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79,224	57,688	14,956	5,936	10,198	2,768	23,830	7,540	13,996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88	100%	23,646	26,019	10.0%
1. 경제	16	18.2%	12,432	14,157	13.9%
2. 안전	2	2.3%		30	100%
3. 통합	60	68.2%	10,132	10,039	△0.9%
4. 인권	5	5.7%	1,079	1,789	65.8%
5. 협력 / 인프라	5	5.7%	3	4	100%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대학교육 강화, 유학생 지역특화형 취업 캠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추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 외국인 거주자 맞춤형 주민세 납부 안내문 발송, 생활안내 'Welcome Iksan Kit' 제작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팸투어 지원, 전주 글로벌 문화행사 「투데이 in 전주」 운영, 글로벌 마을 학당 운영, 전북 외국인 포털 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재외동포 및 국제교류 자문관 활동 지원 등
-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외국인 주거 개선 지원사업, 찾아가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향상 교육,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등

전라남도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1,778,338 명 / 이민자 95,832 명 / 비율 5.4 %

거주 유형별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95,832	70,936	29,115	6,705	4,938	2,896	27,282	8,171	16,725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147	100%	20,448	24,987	22.2%
1. 경제	24	16.3%	6,834	10,092	47.7%
2. 안전	1	0.7%		0.5	100%
3. 통합	104	70.7%	11,317	12,439	9.9%
4. 인권	13	8.8%	1,229	1,583	28.8%
5. 협력 / 인프라	5	3.4%	1,068	873	△ 18.3%

주요 내용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선별 및 비자발급 추천(280명)
- 전국 최초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지정 운영^{신규}
 - 도내 의료보험 미가입 외국인 주민 대상 건강보험 수가에 준하는 의료비 혜택 및 수술·입원비 지원
- 전라남도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신규}
 - 실직, 인권침해 등으로 위기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 임시보호 시설 운영 지원(2개소)
- 전라남도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센터 지정 운영^{신규}
 - 외국인 유학생 등 대상 한국어교육, 상담, 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상담 등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 확대 추진^{확대}
 - 방문상담 운영기관 확대(6 → 16개소), 통역, 법률·노무상담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경 상 북 도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2,578,999 명 / 이민자 128,725 명 / 비율 5.0 %

구분 계	거주 유형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128,725		101,152	29,693	8,291	16,541	8,327	38,300	9,765	17,808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113	100%	28,298	25,858	△8.6%
1. 경제	40	35.4%	17,186	14,264	△17.0%
2. 안전	4	3.5%	74	116	56.8%
3. 통합	54	47.8%	5,808	5,662	△2.5%
4. 인권	15	13.3%	5,230	5,816	11.2%
5. 협력 / 인프라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경북 글로벌 학당 운영, 경북형 초청장학제도 운영, Work in Gumi 취업매칭 연계 지원, 숙련기능인력 홍보 및 접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형 비자 희망이음사업,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 외국인 유학생 치안 자원봉사대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비 지원, 외국인 여성 호신술 교육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경북 세계인의 날 페스티벌, 외국인 근로자 축제,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 외국인근로자 인식개선 캠페인, 외국인주민 사랑방 지원사업 등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원사업, 공공형 계절근로자 그늘막 지원, 외국인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경 상 남 도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3,264,243 명 / 이민자 162,714 명 / 비율 5.0 %

구분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거주 유형별	162,714	128,519	54,925	10,839	5,594	11,767	45,394	12,422	21,773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69	100%	24,379	32,789	34.5%
1. 경제	10	14.5%	3,820	11,325	196.5%
2. 안전		0.0%			
3. 통합	51	73.9%	17,986	18,515	2.9%
4. 인권	8	11.6%	2,573	2,949	14.6%
5. 협력 / 인프라		0.0%			0.0%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지자체장 추천,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환경 개선,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추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산업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유도, 경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등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문화다양성 맘프(MAMF) 축제 추진,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추진,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확대 운영, 다문화 평생교육 지원사업, 고려인주민 정착지원 등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실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및 진료비 지원, 다문화가족 폭력피해 예방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현황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674,817 명 / 이민자 38,714 명 / 비율 5.7 %

구분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38,714	30,511	12,361	3,201	1,524	2,240	11,185	2,824	5,379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24.11. 기준)

과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5년	2026년	증감률
계	29	99.9%	3,721	5,965	60.3%
1. 경제	11	37.9%	1,332	3,284	146.5%
2. 안전	1	3.4%			
3. 통합	16	55.2%	2,110	2,384	13.0%
4. 인권	1	3.4%	279	297	6.5%
5. 협력 / 인프라					

주요 내용

-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운영, 제주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센터 운영, 제주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시장 다변화를 위한 크루즈 관광객 유치,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 사업 등
-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강화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기초학습지원(다배움), 진로설계지원(다채움),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등
-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긴급보호·의료·법률서비스 지원, 이주여성 쉼터 운영